

“집회·서명운동” vs “국회사 투쟁하라”

패스트트랙 여진 계속…여야4당 “향후 한국당과 협의”

한국당 “끼리끼리 추악한 뒷거래, 개탄 금할 수 없어”

여야는 1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따른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함께 처리한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공조를 이어가면서 자유한국당에 ‘국회로 돌아와 협의하자’고 촉구하는 한편, 한국당의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비판도 계속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공동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해 “우리 4당은 앞으로 열린 자세로 한국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며 “추경안 및 민생 관련 법안 심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입장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을 끌수록(패스트트랙 안건) 논의할 시간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한국당이) 들어와서 (논의를) 하면 된다. 여야 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투쟁도 격론도 국회에서 하시라”면서 “한국당이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발목잡기로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며 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한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150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미세먼지, 강원 산불, 지진 등 안전을 위한 대책과 경제 상황을 고려한 민생 추가경정예산이 시급하다”며 “한국당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할 일은 하는 정당의 모습을 국회에서 국민께 보여드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회가 물리적으로 점거당하고 의사일정이 완력에 의해서 중단되는 상황은 패스트트랙이 성공했다고 해서 없었던 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저희가 고발을 취하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서로 반성하고 취하고 했던 과거와는 아마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장외 집회

와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분노를 담아낼 집회·범국민 서명운동 등과 함께 전국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싸우는 국민 중심의 새로운 투쟁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폭력과 폭압으로 의회 쿠데타를 자행한 문재인 정권이 뻔뻔하게 민생 국회 운운한다. 우리가 민생부터 챙기자고 할 때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며 민생과 상관없는 패스트트랙에 올인하더니 느닷없이 여론 호도용으로 민생타령을 한다”며 “정말 민생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국회를 뇌사상태로 만들 수 있

나”라고 비난했다.

그는 추경에 대해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추경을 써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탈원전 정책 등을 비난하며 “경제가 어려운데 세금만 뜯어가는 정권이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완전히 병들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당연히 제게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뒷거래의 끝에 또다시 그들끼리 모인다고 한다. 끼리끼리 추악한 뒷거래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연협뉴스



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홍영표·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회동을 마친 뒤 곁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협뉴스

손학규, 주승용·문병호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하태경 등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 반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일 공식 중인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에 국민의당 출신인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에 하태경·이준석·권은희 등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3명과 국민의당 출신 김수민 최고위원은 “원천무효”라고 즉각 반발, 바른미래당의 내홍은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손 대표의 이날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은 4·3 보궐선거 참패 후 바른정당계 최

고위원들이 손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한 당무 정상화로 자신에 대한 당내 사퇴 요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손 대표는 “그동안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외연을 넓히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 내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며 “그러나 최고위원 세 분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게 벌써

한 달이 다 돼 당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명된 주승용(여수) 의원은 4선으로 현재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다. 주 의원은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대표 권한대행을 지냈다.

영암 출신으로 17·19대 의원을 지낸 문병호 전 의원 역시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현재 인천시장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손 대표는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의 당무 복귀를 거듭 촉

구했다.

손 대표는 “최고위에 불참하고 있는 세 분께 당무에 복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당 화합을 방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태경 의원을 포함한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3명은 손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하 최고위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당헌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할 때 최고위원들과 협의하게 돼 있는데 오늘 최고위는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만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에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은 손 대표의 임명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진수기자

주승용 “여수시립박물관타당성 사전평가통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은 1일 “여수시립박물관이 지난달 29일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민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필수 시설인 여수시립박물관은 사업비 28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 면적 6천300㎡ 규모로 건립되며, 올해 1월 말 박물관 부지를 옹천동 이순신공원으로 확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한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는 지난 3월 21일 서면평가를 통과했고, 4월 초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평가심의위원회가 이순신공원에서 박물관 건립 계획과 소장 유물 등을



확인·조사하는 현장 실사를 거쳤다. 향후 박물관 건립 계획이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를 통과하면 사업비 280억원 중 국비 112억원(40%)을 확보해 오는 2022년 개관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박물관 설립 타당성 평가를 위해 여수시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문제부 장관을 만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했다”며 “여수시와 함께 잘 준비해서 문제없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천정배, 일제 식민지배 진상규명 결의안 제출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울) 의원은 1일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 잔학행위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중심의 정의·인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천 의원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은 국제법원과 자국 법원에서 전범들을 처벌했으나 우리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국제법원 및 우리 법원에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 처벌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일제 침략 및 식민지배 역사와 중대한 인권 침해의 진상에 대한 철



저한 규명 및 규범적 판단, 유해 봉환으로 훼손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이어 “국회가 결의안 통과로 우리의 독립과 주권 회복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새기고,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가 남긴 중대한 인권 침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기자

장병완, ‘5·18특별법’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는 1일 열린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지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여야4당 합의문에 따라 5월18일 이전에 ‘5·18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다.

장 원내대표는 “여야4당 합의대로 5월 18일 이전 5·18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이 5월 영령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애곡·편제를 종식시키고, ‘5·18진상규명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5·18 관련 특별법 처리



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30여 일째 구조조치 되지 못한 ‘5·18진상규명위’를 하루속히 출범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한국당에서도 조사위원 자격에 대한 ‘5·18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출했으니 5·18 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광양 출신 김명규 전 국회의원 별세

14·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명규 전 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10시 4분께 수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김 전 의원은 광양 출신으로 14대 총선에서 광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15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원내부총무와 새천년민주당 총재특별보좌관 등을 맡아 활약했다.

이후 제일학원 이사장, 한국가스공사 사장, 씨채널방송 대표이사 회장, 진명

스텝스 대표이사 회장,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법무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승규 변호사의 형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정경숙 씨와 딸 정화·정원·영경·영은 씨, 사위 박영진(태안과 의사)·방재웅(한국수자원공사 차장)·한민제(강동성심병원 의사)·조태하(위대항맥외과 의사) 씨가 있다. 빈소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일 오전 5시30분. 02-2072-2091

/김진수기자

오 천 경 매

투자제 관한 모든 상담
010-3605-5000

신창동 근린상가

금매
전문

✓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매매-8억 8천만원(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

경매 투자자

[빌딩]

- 유럽풍 최고급 상가주택
도심속 전원별장 무등산자락 2차선도로접
대지230㎡ 건335㎡ 매가:상담후결정
- 계림3지구 재개발지 대로변 상가50% 급처분
2차선도로접 대지445㎡ 건1,500㎡
급매가11억(3.3㎡당820만원)
- 사옥, 병원, 은행 건물
대인동 대단지 아파트, 대인시장인접
4차선대로변 대지515㎡ 건평2,100㎡
병원 허가병상70개
매가 : 협의후 결정(임대도 가능)
- 산수5거리 대로변 상가
대지162㎡ 건평500㎡ 급매가 7억

=====

지역별, 금액별, 종류별, 매물 다량 확보중입니다

=====

*** 빌딩, 상가, 주택, 임야등 썬매물 바로 계약합니다

===매수고객 다수 현금들고 대기중입니다.

금매부동산 [즐거운부동산] 유재관 대표공인중개사 010-6495-3787

광주 동구 제봉로198(대인동312-26)

오 천 경 매
010-3605-5000